

초국가적 사회운동과 개인의 국제정치:

국가 권위에 대한 도전과 이론적 함의*

민병원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 논문은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행위주체인 국가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초국가적 사회운동의 근원과 작동 논리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동안 초국가적 사회운동의 경험적 연구에 비해 이것이 국제정치이론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초국가적 사회운동이 정치적 행위자의 '권위'를 둘러싸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초국가적 사회운동의 미시적 메커니즘, 즉 정치적 '개인'이 국가의 권위에 왜 복종하고 왜 저항하는가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정치의 본질이 엘리트 중심의 하향식 권력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보통사람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 권력관계에서도 유래한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다. 특히 정치적 개인의 요구가 얼마나 잘 충족되는가가 권위의 원천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민불복종 운동이라는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국내정치의 논리는 대외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국가의 이와 같은 부담이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는 '약속'이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권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세계화 시대의 변화된 분위기를 언급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개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국가의 기존 권위체계를 흔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초국가적 사회운동, 국가, 권위, 개인, 기본권, 국제정치이론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B00038).

I. 들어가는 말

탈냉전기에 들어와 다양한 정치적 변화가 전개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초국가적 사회운동은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의 역할과 권위에 도전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구성원으로서 개인들이 정치적 권위에 대하여 보여 온 복종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들은 초국가적 사회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국가질서를 전복하거나 수정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동안 초국가적 사회운동의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사례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이것이 국제정치이론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 단지 초국가적 사회운동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표층적인 기술이 이러한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초국가적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주권의 독점적 보유 주체인 국가가 왜 권위를 이양 또는 분산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아쉬운데,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초국가적 사회운동이 정치적 행위자의 ‘권위’를 둘러싸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초국가적 사회운동의 미시적 메커니즘, 즉 ‘정치적 개인’이 국가의 권위에 왜 복종하고 왜 저항하는가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정치의 본질이 엘리트 중심의 하향식 권력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보통사람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 권력관계에서도 유래한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다. 특히 정치적 개인의 요구가 얼마나 잘 충족되는가가 권위의 원천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민불복종 운동이라는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리는 국내정치적 맥락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를 국제정치에도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주권적 권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

다. 특히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개인들의 ‘기본권’에 대한 관념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국가의 기존 권위체계를 흔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우선 다음 장에서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 권리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간단히 소개하고, 초국가적 사회운동의 등장과 국가의 쇠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기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권위’의 주체인 국가에 대한 도전에서 ‘개인’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 권위의 기반을 형성하는 ‘약속’이 무너지는 경우 이것이 어떻게 저항과 새로운 대안의 모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세계의 관행을 탐구한다. 또한 세계화 시대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통해 ‘기본권’의 관념이 확대되는 모습을 그려낸다. 이어 초국가적 사회운동에 관한 이상의 논의가 국제정치이론의 재구성에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개인이라는 정치적 행위자의 차원과 네트워크라는 구조적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할 예정이다.

II. 세계화 시대의 국가와 개인: 시민불복종과 권위의 재분배

1. 국가의 권위와 시민불복종: 국내정치적 차원

권위에 저항하는 능력은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다. 일찍이 프롬(Erich Fromm)이 언급했던 대로 자유와 불복종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가치이며, 진정한 복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양심과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강제력에 의한 복종은 공포와 위협을 동반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종이라고 할 수 없다.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홀로코스트를 주도했던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도덕적 양심보다 조직의 일상적인 관행에 기계적으로 적응해 온 인간은 불복종의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자신이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된다. 주어진 권위를 비

판하거나 그에 불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류문명의 종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프롬의 주장이었다(Fromm, 1987: 19-22).¹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자유로운 개인’은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기반으로 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주권적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치주체였다.

시민사회운동의 기초를 제공한 쏘로(Henry David Thoreau)는 ‘작은 정부’의 사상에 기초한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제창하였다. 그는 정부가 사사건건 개인의 사생활에 관여하는 일은 옳지 않으며, 국민이기 이전에 개인이 중요하고 법 대신에 정의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Thoreau, 1999: 11-14). 특히 다수결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라도 스스로 의롭다면 그는 이미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만약 이러한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감옥에 가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자 행동강령이었다. 그만큼 쏘로에게 있어서 정부의 권위는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피통치자의 동의 하에 제한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불복종 또는 사회운동은 기존 정부나 제도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형태의 정치참여라고 할 수 있다(Bedau, 1961: 665).

국가의 정치적 권위는 자연상태가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근거가 그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출발한다(Raz, 1981: 106-107). 이런 시각에서 보면, 국가의 권위는 국민들의 동의에 기반한다 하더라도 그 지속성이나 범위에 있어 제한적이어야만 한다(Winch, 2002: 25). 국가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권위는 실추되고, 그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의 기관이 정치적 권위를 넘겨 받아야 한다(Krehoff, 2008: 284-287). 이러한 생각은 지난 수백 년 간 근대 국민국가 개념의 기초를 떠받쳐 온 ‘주권’ 관념을 뒤흔들고 있는데, ‘공

1. 아렌트가 기록했던 아이히만 재판 사례는 인간에 대한 고려 없이 명령에만 복종하는 기계화된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에 대한 최초의 관찰이었다(Arendt, 2006 [1963]). 1970년대에 이루어진 스탠리 밀그램의 심리학적 실험도 도덕성을 결여한 채 권위에 복종하는 무책임한 개인의 성향이 도처에 만연해 있음을 직접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Milgram, 2009[1974]).

극적 권위(ultimate authority)'로서 주권이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현실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국가가 정치적 권위를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실천적 근거에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국가의 권위와 관련하여 홉스(Thomas Hobbes)의 전통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정치제도가 선행하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을 그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적 동의의 원천이 개인의 판단이 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관계는 역전되고 있는 것이다(Murphy, 1997: 115-116).

한편 존 롤즈는 정치적 권위에 대한 시민불복종이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이는 다수결원칙이 지닌 한계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불복종을 '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킬 목적 하에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정의했다(Rawls, 2003: 475). 롤즈의 이러한 규정은 시민불복종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사회운동이 법치국가를 전제로 한 하나의 저항권으로서, 법치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수단임을 천명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불복종에 관한 롤즈의 논의는 소로의 논의와 성격을 달리 한다. 소로가 개인의 양심에 기반을 둔 양심적 거부를 내세웠다면, 롤즈는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불복종을 강조했다. 양심적 거부의 경우에는 종교나 기타의 이유에서 불복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수에게 호소할 필요가 없으나, 시민불복종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아렌트에 따르면, 정치적 권위는 단순한 폭력이나 강제적 수단과 다르며, 동시에 합리적인 설득행위와도 구분된다고 보았다. 아렌트가 생각했던 권위의 핵심적인 요소는 '위계질서'로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공히 그 안에서 안정된 위치를 차지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럼으로써 권위에 복종하는 개인들은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유를 지킬 수 있으며 권위의 합법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렌트가 규정한대로, 시민불복종과 같은 사회운동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면서 정치적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의 권리로 볼 수 있다. 권위는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 사이의 정치적 관계로서, 양측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위계질서를 전복하

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Arendt, 1961: 106).

결국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기존의 위계질서적 권위에 저항하는 행위로서,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제도나 정책을 바꾸려 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저항이어야 하고, 불복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내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Power, 1970: 36-37). 많은 학자들은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법에 불복종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 왔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공의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양심에 따를 것인가 하는 가치관의 갈등과 충돌이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Jones, 2004: 319-320; Spitz, 1954: 392). 이러한 논쟁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지만, 사회운동으로서 시민불복종이 개별적 법규나 정책을 위반 또는 거부하는 차원을 넘어 전체 법질서를 무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다는 데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중요한 점은 그것이 기존의 정치제도에 대한 도전을 제기하며, 특히 권위를 독점하는 국가에 대한 대안의 시각을 찾는 노력에 공헌해 왔다는 사실이다.

불복종의 권리는 그 동안 법철학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권위에 대한 복종과 개인의 양심 사이에서 부득불 불복종을 선택하는 소수의 시민들이 겪게 되는 딜레마가 핵심적인 주제였다. 미국 헌법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시민들의 불복종 권리를 명문화할 수 없지만, 이러한 불복종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불복종 행위가 분열을 조장하고 혼란을 유발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들을 처벌할 권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법원이 공동선에 대한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소수의 불복종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면, 적어도 시민들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원칙이 갖는 의미를 결코 기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드워킨(Ronald Dworkin)의 주장이었다. 권위를 지닌 정부는 언제나 시민들의 권리를 ‘진지하게(seriously)’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이다(Dworkin, 2010: 392-393).²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국내정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권위에 대한 도

전이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정치에서 정치적 권위라 함은,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위계질서로서 국가들 간에 또는 국가와 국제법 및 국제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를 가리킨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국제정치 주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Hurd, 2008: 26). 국제정치에는 최상위의 정치체가 없지만, 주권국가들 사이에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며, 이들은 국제기구, 국제법, 조약, 국제레짐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권위를 부여 받는다. 만약 국제정치에서도 이러한 권위가 존재한다고 보면, 이에 대한 저항 또는 불복종 역시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은 초국가적 사회운동이 국제정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의 메커니즘을 탐색하기 위한 집단행동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는 초국가적 사회운동의 일반적인 성격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국가의 위축과 초국가적 사회운동의 등장

1990년대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세계화의 추세가 진행됨으로써 국제정치의 대변환을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세계화의 추세는 국가들 사이에, 그리고 다양한 계급과 신분 사이의 격차를 급속도로 확대해왔는데, 이에 대한 반발도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 국제정치에서 초국가적 사회운동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 1994년 멕시코에서 일어난 싸파티스타(Zapatista) 운동은 북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운동으로서, 전 세계의 동조자들을 규합하는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였다. 규제완화와 무역개방 등 선진

-
2. 예를 들어 시민불복종에 대하여 대법원이 불법적 행위라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이에 대한 불복종 행위 자체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드워킨의 주장이다. 말하자면 대법원은 법을 확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는 것이다. 다만 하급법원들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불복종자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 최소수량이나 유예 판결을 내리는 ‘진지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Dworkin, 2010: 423).

국 중심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글로벌 차원에서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었다. 1997년에는 다자간 투자협정(MIA)에 대한 저항이, 1999년에는 세계무역기구 회의 반대시위가 벌어지면서 ‘반(反)세계화’는 탈냉전기의 세계를 특징짓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1년에 결성된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은 반세계화 운동의 절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국제정치학에서 ‘국가의 쇠퇴’에 관한 담론들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였는데, 학자들은 세계화의 추세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국가의 기능과 권위가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Strange, 1996; Ohmae, 1996). 이와 같은 분위기는 1960년대 이후 경제적 갈등을 넘어 다양한 이슈를 둘러싸고 국가의 중앙집중적 권위체제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지속된 ‘신(新)사회운동’의 분위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과 보수진영의 결집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 상징으로서 초국가적 사회운동이 199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정의(global justice)’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해 왔으며, 더 나아가 기존의 국가중심적 세계질서를 개편하고 대안의 질서를 모색한다는 ‘대안세계화(alter-globalization)’를 구호로 내세웠다(West, 2013: 129).³

초국가적 사회운동은 비(非)국가행위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이들 모두는 공식적인 국가 권위에 도전하거나 이를 개선하려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리하여 1990년대가 중앙집중형 권위체제를 뛰어넘어 분산형 시스템을 지향하는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의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었다(Rosenau, 1992: 4-5). 사람들은 점점 복잡해지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3. 초국가적 사회운동은 1990년대에 급격하게 일어났는데, 그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중심적 국제체제에서도 그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려는 노력들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92년의 리우 환경정상회담, 1995년의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정상회담(WSSD)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를 위한 캠페인, 1996년의 세계식량정상회담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Pianta and Marchetti, 2007: 35-39).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1999년의 ‘시애틀 전투’ 즉 세계무역기구 회담을 좌절시켰던 적극적 공세야말로 주권으로 상징되는 근대의 정치질서를 뛰어넘어 새로운 정치주체를 이룩하기 위한 범(汎)세계적 차원의 노력이었다. 초국가적 사회운동은, 어느 학자가 지적한 대로, ‘변경된 상황(fortuna)’에 대한 ‘새로운 제도(virtu)’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결실로서 ‘탈근대적 군주(postmodern prince)’라 칭할 만한 새로운 정치현상이었다(Gill, 2000: 137-138).

정치적 권위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을 볼 경우, 세계화의 추세로 인한 국가의 쇠퇴는 권위의 ‘축소’ 또는 ‘분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으로 국가가 독점해 온 권위를 둘러싼 경합관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권위는 앞서 논의한대로 ‘제도화된 권력’의 형태 또는 표현으로서, 단순한 무력뿐 아니라 그것의 사용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다시 말해 권위의 위계질서는 그것을 만들고 행사하는 자와 그에 복종하고 따르는 자 사이의 정치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Rittberger et al., 2008: 2-3). 탈냉전기의 정치적 변화는 민주화, 민족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를 통해 전개되었는데, 이 3가지의 추세는 모두 전통적인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더 이상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러한 충격을 전달하는 통로로 작용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위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된 것이다(Holm and Sørensen, 1993: 275-279).⁴

그런데 이와 같은 초국가적 사회운동의 확산 추세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로서, 국제정치 행위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상은 국내정치 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시민불복종 행위와 대비되는 것인데, 오랫동안 국가라는 주권적 행위자에 자

4.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폐해가 될 수 있다는 ‘국가의 실패(state failure)’ 담론은 21세기에 들어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담론은 국가제도의 인류학적 역사와 한계로부터 정책 실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Rotberg, 2004; Bates, 2008; Acemoglu and Robinson, 2012).

신들의 권리를 위임해 온 개인들이 이제는 국가의 틀을 넘어 직접적으로, 또는 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초국가적 사회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탈냉전기에 들어와 국가안보보다도 ‘인간안보’ 또는 ‘개인의 해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Bilgin, 2003: 207). 특히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TINA: There Is No Alternative)”는 원칙 아래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추세 속에서 다수의 개인들은 한 계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개인들 사이에 보편가치에 대한 열망을 불러 일으키면서 국가중심적 표준제도에 대한 저항의 물결을 일으키게 되었다(Chesters and Welsh, 2006: 40).

이와 같은 상황은 개인의 자유를 지고의 가치로 간주해 온 서구 자유주의의 오랜 전통을 고려할 때 하나의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근대 자유주의 국가체제가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으로 진화하면서 오히려 개인들을 ‘국제적 배제(international exclusion)’의 환경에 처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Marchetti, 2009: 134). 이 과정에서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장치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제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전통적인 권위의 원천이라는 자격에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문제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국가들이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소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서 다수의 ‘포괄적 이익(encompassing interest)’을 보장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에 있다(McGinnis, 2004: 42).

이처럼 전통적인 주권국가가 구성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세계화의 복잡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권위 축소와 대안의 질서에 대한 요구는 근대 주권국가 이전에도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하나의 패턴이다. 정치체도가 신민(subjects)에게 적절한 보호와 복지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그것이 제국이든, 왕조이든, 국가이든 간에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권위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중국에는 새로운 체제에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이다(Reus-Smit, 2011: 237).⁵ 그만큼 인류가 경험해 온 다양한 정치체제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인간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였으며, 그들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

할 경우에는 어떤 정치체제건 간에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지난 수백 년 간 국제정치의 표준으로 자리잡아 온 국가 중심의 질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기능과 권위에 있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초국가적 사회운동이야말로 이러한 도전의 선봉에 서 있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의 바탕에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요구와 성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III. 초국가적 사회운동과 개인: 국가의 권위와 기본권의 관계

1. 초국가적 사회운동과 개인의 위상

오늘날 개인에 대한 관심은 비단 국내정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초국가적 사회운동과 같은 국제정치 현상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개인의 위상이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오랜 역사를 지닌다. 사회과학에서는 인간과 집단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인간 개인의 행동과 본성이라는 미시적 측면에 주목해 왔는데, 이러한 전통은 구조와 체제 등 거시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대비되는 별도의 접근방법을 구축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합리적 선택 패러다임인데, 인간의 본성이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인간행동을 효용 극대화의 논리로 설명한다. 기대효용이론, 게임이론, 사회적 선택이론 등 여러 이론들을 통해 합리적 선택 패러다임은 그 동안 거시적 설명방식에 경도되어 온 사회과학의 탐구방식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초국가적 사회운동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도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이나 정치과정이론(political process

-
5. 루스스미트(Christian Reus-Smit)는 정치의 근본적인 단위체로서 ‘개인’과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가 보유해 온 ‘주권’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관계를 ‘생성적 패러독스(generative paradox)’라고 부른다. 증가하는 개인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인권 등 다양한 국제제도와 규범들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국가는 스스로의 권위의 원천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us-Smit, 2011: 237). 이러한 모습은 러기(John Ruggie)가 언급한 탈근대적 ‘영토 해체(ubundling territoriality)’ 현상에 해당한다(Ruggie, 1993: 160).

theory)과 같이 합리적 선택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Edwards, 2014: 42-43).

물론 합리적 패러다임만이 개인을 기반으로 한 설명방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의미와 문화를 증시하는 대안의 패러다임도 자주 활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시도는 “어떤 개인을 상정하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출발점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말하자면 합리적인가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개인들이 사회운동이나 불복종운동과 같은 집합적 행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Jasper, 2004: 235). 이런 접근방식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이나 신념과 달리 주위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리하여 개인들은 집단 속에서 안정적인 소속감과 정체성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얻는 결과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토크빌이 관찰했던 ‘다원적 무지(pluralistic ignorance)’는 개인들이 스스로의 신념과 배치되는 주장에 동조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스스로가 믿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이에 동조하겠다는 군집동조 성향을 의미한다(Elster, 2007: 376-377).⁶ 이처럼 개인들은 합리적 이유에서 또는 문화적 이유에서 집단적으로 초국가적 사회운동에 참여하며,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통해 대안의 질서를 모색하는 노력에 동참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개인의 위상은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국가나 사회와 같이 집단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인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거시적 현상을 창출하는 개인들 사이의 메커니즘이야말로 초국가적 사회운동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물론 개인의 위상을 중시한다고 해서 방법론적 개인주의 또는 환원주의를 지지할 필요는 없다. 개인은 다른 개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개인과 사회 사이에, 또는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

6. 엘스터(Jon Elster)는 사회과학의 기본 분석단위가 개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개인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며, 그 인과적 패턴을 찾아내는 일이 ‘설명’의 본질적인 과제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Elster, 2007: 36-37).

지는 동적 메커니즘을 살펴보아야 한다(Jasper, 2010: 973-974). 인간을 ‘주어진 것(given)’으로 간주하는 홉스의 전제를 뛰어넘어 ‘사회적 개인(social individual)’으로서 인간을 다루는 것이 사회과학의 목표이기 때문이다(Tetreault and Lipschutz, 2009: 1-3).

국제정치에서 개인이 중요해지는 또 다른 배경으로서 영웅이나 지도자가 아닌 일상의 보통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푸코의 ‘생명정치(biopolitics)’ 철학은 이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강조해 왔는데, 이것은 주권자의 지배가 정치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다. 그가 보기에 권력관계는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권력 네트워크 속에서 국가는 오로지 한 가지 형태에 불과할 따름이었다(Foucault, 1980: 122). 이렇게 포괄적인 시각에서 보면, 안정적인 국가질서나 불안정한 혁명, 또는 사회운동 모두 권력이 투사되는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무제한적으로 권력과 권위를 독점한다고 간주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할 경우 이를 변화시키거나 전복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급진적 시각의 이면에는 바로 궁극적인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개인에 대한 성찰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국내정치에서나 국제정치에서 ‘보통사람들(ordinary people)’의 저항과 반란은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Piven, 2006: 1-2). 이들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논리보다는 자신들의 삶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권위를 인식하는 성향이 있다. 즉 하늘이 내려 준 것이라는 종교적 권위가 가상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주권자의 권위는 오늘날 보통사람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해결해주는 ‘실천적(practical)’ 차원의 능력과 권위를 요구하며, 만약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고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모색하고자 한다(Krehoff, 2008: 285). 이렇게 보면 정치적 권위가 단순한 행위능력의 차원을 뛰어넘어 합법적인 인식이 동반되는 권력관계라는 점이 분명해진다(Lipschutz, 2000: 165).⁷ 권위의 대상, 즉 일반 대중으로부터

7. 행동의 주체로서 개인이 궁극적으로 권위를 부여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영웅이나 지도자보다 일상생활의 정치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푸코의 주장은 분명 정치의 탐구

상향식으로 부여되는 정당성이 ‘권위’와 ‘단순한 무력’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초국가적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주요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는데, 공동체주의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개인의 행위가 권리 차원을 뛰어넘는 공동체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월쩌(Michael Walzer)는 이와 관련하여 개인주의적 저항권이 실제 역사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불복종을 야기하는 도덕, 종교, 정치 등 다양한 동기들이 지닌 집단적 속성을 부각시킨다. 그에 따르면, 사회제도는 원칙에 대한 ‘약속’이며, 이러한 약속은 공동체 내의 타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말하자면 불복종과 저항의 의무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라고 본다(Walzer, 1970: 3-4).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이 초국가적 사회운동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상을 논하는데 있어 반대되는 입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쏘로와 같이 상징적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불복종운동을 펼쳤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초국가적 사회운동은 다양한 집단들의 공동선을 구호로 하는 사회적 결집체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개인은 집단과 연계된 상태에서 권위에 대한 복종 또는 불복종의 권리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개인들의 요구사항은 언제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그 의미를 지니며, 집단은 하나의 ‘관심공동체(community of interest)’로서 개인의 문제를 보살핀다(Arendt, 1969: 55-56). 특히 개인들 사이의 수평적 계약을 통해 권위를 보유하는 정부는 그러한 약속이 존재의 근거라는 점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약속과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암묵적 합의(tacit consensus)’로서 존재하며, 특히 개인들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모두를 대변하는 ‘보편적 합의(consensus universalis)’라는 의미를 지닌

대상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국가의 전통적인 권위가 약화되고 개인의 정당성 부여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의 등장을 일컬어 ‘권위 이후(after authority)’라고 부르기도 한다(Lipschutz, 2000: 157-160).

다(Arendt, 1969: 86-87). 개인들의 복지와 보호는 이러한 보편적 합의에 포함된다고 간주되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개인들은 협력하여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 초국가적 사회운동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권위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의 약속과 권위의 상황의존성

정치적 권위를 형성하는 약속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정치적 합의와 약속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복잡한 정치적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합의와 약속은 학습되고 전수되며, 문화적 맥락에 맞춰 변경될 수 있다(Winch, 2002: 31). 국가의 권위가 주권이라는 구호 아래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는 시기는 이제 지나갔으며, 앞서 언급한대로 실천적 목적에 맞는 기능과 역량에 따라 권위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일찍이 홉스가 주장했던 것과 같이 ‘위로부터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정치적 권위는, 이제 실천적 목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 하는 기준에 따라 ‘아래로부터 결정되는 것’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야말로 근대국가의 주권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권위의 기반을 흔들면서 그에 대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메커니즘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우선 미국법의 전통 속에 구축된 시민불복종의 전통이 이러한 메커니즘의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 헌법이나 국내규범에 불복종의 조건이 규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매우 치열한 논쟁을 야기하는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법은 “법이 법의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원칙이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복잡적이다. 우선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요인을 법체계 내부에 두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이나 여타 유형의 저항운동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려 한다. 하지만 미국의 법체계는 이러한 저항으로 간주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판결을 거부해 왔다. 베트남전과 관련한 심리를 거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이를 통해 미국 법원은 법적 통제권 밖에 놓여 있는 사안에 대하여 무리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로부터 ‘정치문제의 법리(political question doctrine)’라는 원칙이 수립되었고, 이는 논쟁이 종료되지 않은 정치적 사안을 법적 논리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전통으로 이어졌다(Arendt, 1969: 99-102). 이와 같은 미국법의 관행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주권 또는 최상의 권위조차도 필요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거부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하여 국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러한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약속은 본래 상호적이기 때문에 원래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러한 약속은 ‘파기’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약속 위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나아가 저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로크적 전통이 작동한다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점은 시대적으로 사회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저항의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권위에 저항하는 개인들은 앞서 언급한대로 집단의 일원으로서 상호 간의 약속이 깨졌다고 생각할 경우 이에 저항하는데, 무엇이 약속의 내용이며 새로운 약속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권위는 상황의존적으로 부과되며, 사회 전반에 걸쳐 공유된 가치체계, 즉 ‘시대정신(Zeitgeist)’를 기반으로 형성된다(Arendt, 1969: 98-99).

국가의 권위가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는 생각은 근대 국제정치질서 속에서도 수백 년에 걸쳐 자리를 잡아 왔다. 국제법과 조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은 일방에 의한 약속 파기가 자동적으로 다른 쪽에 이의제기나 저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러한 ‘계약의 신성함’은 종교적 신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국제사회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Wehberg, 1959: 775). 만약 이러한 약속의 신성함이 깨질 경우, 공동체 전체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게 된다는 경고가 깃들어 있었다. 이와 같이 약속을 근간으로 한 정치적 관계는 비단 국가-국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기업, 국가-개인의 관계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Wehberg, 1959: 786). 오늘날 확산되는 초국가적 사회운동도 이와 같이 국가의 권위에 함축되어 있는 약속의 부재 또는 위반을 그 출발점으로 한다. 그리하여 초국가적 사회운동은 국제법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제도적 장치로서 새로운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에서 약속의 위반에 대한 또 다른 관행으로 확립된 원칙이 바로 ‘사정변경의 조항(Clausula Rebus Sic Stantibus)’이다. 만약 국제법이 완벽한 조건 하에서 체결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예외조항은 불필요할 것이며, 법을 충실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주장에 이의를 달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 전통은 그렇지 못한 현실의 모습을 담아 내고자 했는데, 예를 들어 바텔(Vattel)과 같은 학자들은 ‘유해한(pernicious) 조약’의 경우 또는 주권자가 신민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하는 경우 ‘사정변경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파했다(Bullington, 1927: 154). 이는 곧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의 의무가 해지되며,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초국가적 사회운동은 이런 점에서 ‘사정변경’의 상황을 전제로 한 약속의 파기와 새로운 합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200여 개가 넘는 국가들 사이에서 이상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정변경의 원칙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비록 국제정치가 강제관할권을 갖는 완전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오랜 상호작용과 관행을 통해 국가들 사이에, 그리고 국가와 다른 정치적 행위자 사이에 정치적 계약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이는 국내정치적 계약관계의 연장이라는 맥락에서도 일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국제정치는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 그리고 국가와 그에 대한 도전 세력들 사이에 약속을 둘러싼 긴장관계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불안정해질 경우 새로운 권위와 관할권을 쟁탈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합관계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정치체의 기본 단위를 형성하는 개인들의 ‘인간적 조건’을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가에 따라 정치적 권위의 분산 또는 이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Holm and Sørensen, 1993: 295-297). 다음 절에서는 이

와 같은 개인의 조건들이 세계화 시대에 들어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개인의 기본권 확대와 초국가적 사회운동

세계화 시대에 들어와 국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더욱 빈번해지고 또 심각해지는 이유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전 세계의 다양한 개인들은,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으며, 그러한 권리를 심각하게 위축해온 신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서 초국가적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복구하려는 ‘기본권’이 과연 무엇이며, 이것이 왜 오늘날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권이란 최소한의 합리적 요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합리적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기본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다른 모든 권리를 향유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권이 아닌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기본권을 희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느 누구도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Shue, 1980: 19).

일반적으로 기본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정치·법적 권리고 다른 하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이다. 두 가지 유형의 권리는 모두 1966년 국제연합의 주도로 체결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바 있다. 정치적·법적 권리는 자결권, 노예제 금지, 생존권, 종교의 자유, 정치적 억압의 금지, 난민의 지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에 비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노동권, 건강권, 교육 및 문화적 권리 등을 포함한다. 전자의 권리가 상위정치(high politics)를 바탕으로 한 소극적 권리로서 ‘간섭 받지 않을 권리’에 해당한다면, 후자의 권리는 하위정치(low

politics)에서 유래한 적극적 권리로써 ‘증진시켜야 할 권리’에 해당한다.⁸ 지금까지 기본권의 관념은 주로 정치적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왔는데, 이는 자유나 평등과 같은 상위정치적 관념들이 의식주나 건강과 같은 하위정치적 관념보다 앞선다는 전제 위에 통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국가의 권위도 이러한 상위정치적 관념 위에 수립된 것으로서, 시민의 권리 보호는 어디까지나 ‘간섭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본권에 대한 관념이 세계화 시대에 들어와 바뀌기 시작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차원에서 이러한 기본권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크게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의무론(deontology)’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최대 다수에게 최대한의 복지와 행복을 부여하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사회의 부가 재분배되어야 하는 경우 그것이 부자들에게 큰 희생 없이도 가능하다면 마땅히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본권도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만큼 공리주의적 접근에서는 기본권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가치가 중대한 수준의 희생을 동반하지 않는 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inger, 1972: 230-231).

하지만 의무론적 접근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헨리 슈에(Henry Shue)의 기본권 개념은 이런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를 구분하는 관행을 거부한다. 그에 따르면, 이 두 권리는 모두 ‘간섭 받지 않을 권리’와 ‘적극적인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동시에 지닌다. 슈에는 ‘안전(security)’과 ‘생계(subsistence)’라는 두 가지의 목표가 기본권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

8. 이러한 권리 구분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발전과 일맥상통한다. 두 가지 유형의 권리 구분 이외에 최근에는 집단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종족, 여성, 아동, 원주민 등과 같이 집단의 속성으로 인한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Henderson, 2010: 300-305).

며,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의 우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두 요소는 공히 다양한 인간의 권리를 향유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Shue, 1980: 20-29).⁹ 이런 점에서 슈에의 의무론적 접근은 정치적 권위에 대한 저항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세계화의 추세와 더불어 보장 또는 보호해야 할 기본권의 리스트를 증가 시킴으로써 국가 행위자가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더욱 많은 요구와 불만에 노출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의무론의 또 다른 방식으로서 토마스 포게(Thomas Pogge)의 비판적인 시각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포게에 따르면, 오늘날 선진국 또는 지배적인 국제 질서가 전 지구적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질서와 브레튼우즈체제로 대표되는 경제질서는 글로벌 차원의 불평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왔는데, 이런 점에서 기존의 국제질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국가나 국민들에게 ‘위해(harm)’를 가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게는 선진국 차원에서 글로벌 질서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빈곤국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원조의 의무 또한 크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포게가 분석하고 있는 글로벌 질서와 제도는 그것이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위해로 인해 정의를 결여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Pogge, 2005: 4-5).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선진국과 그 시민들이 기존 국제정치질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는 경고가 자리 잡고 있다. 만약 이러한 경고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정치질서의 약속에 대한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의 초국가적 사회운동의 여러 양상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 여성, 노동, 인권,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9. 헨리 슈에의 기본권 논의는 1970년대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미국외교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논쟁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 카터 대통령의 인권외교는 무엇이 인권의 내용이며 본질인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급기야는 미국외교정책의 목표가 지나치게 ‘안전’의 문제에 치우쳐 왔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Beitz and Goodin, 2009: 1).

전개되고 있는 초국가적 사회운동의 근원에는 슈에의 주장대로 ‘안전’과 ‘세계’를 동시에 요구하는 글로벌 차원의 ‘기본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체제뿐만 아니라 이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국제제도와 질서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암묵적 약속을 지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만약 글로벌 차원의 불평등을 관리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글로벌 분배정의(global distributive justice)’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Tan, 2010: 261).¹⁰ 결국 전체 사회의 문제로서 특정한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은 구성원 개인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Beitz and Goodin, 2009: 9-10). 물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달리 구성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제도 역시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국제정치이론은 국가 중심의 현실주의적 시각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1970년대 자유주의적 관점이 대폭 확산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글로벌 차원의 정치현상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은 건재하다. 하지만 국제사회를 하나의 단위체로 보고, 국가의 권위에 대한 개인과 비(非)국가 행위자들의 도전을 현실주의 패러다임 안에서 설명하는 일은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세계화의 추세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의 권위를 약화시켰고, 초국가적 사회운동과 같은 ‘대안의 제도’를 제시해 왔다. 이러한 제도는 글로벌 차원의 정치현상에 관련된 모든 개인들을 이슈에 따라 통합된 사회운동으로 묶어 준다는 점에서 ‘조정제도(mediating institutions)’라고 불린다(Beitz and Goodin, 2009: 15). 이러한 조정제도들은 과거에 국가가 그랬듯이, 세계화에 노출된 개인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역할을 떠맡고 그에 필요한 권위를 이양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바로 초국가적 개인들의 기본권을 근간으로 하며, 세계화의 추세는 전통적인 기본권의 범위를 확장함으

10. 글로벌 분배정리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로서 존 롤즈(John Rawls)의 『만민법』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정의론』에서 사회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해 제시한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이 국제사회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는데, 이를 국제사회로 확대 적용한 것이 바로 『만민법』이다.

로써 점점 복잡해지는 세계정치의 권위 문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IV. 초국가적 사회운동의 이론적 함의: 국가의 한계와 네트워크

국제정치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국가와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현실주의적 시각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근대 국제정치질서에 내재된 모순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초국가적 사회운동은 이런 점에서 국제정치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초국가적 사회운동이 국제정치이론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서, 근대의 주권적 정치체로서 권위를 독점해 오던 국가가 세계화 시대에 들어와 그 역할과 기능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위상으로부터 밀려나고 있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두 번째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네트워크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먼저 초국가적 사회운동이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현상이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아울러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불만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로 인해 권위의 원천을 다른 정치적 메커니즘에서 찾으려는 대안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충분히 논의되었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따르면 개인은 부당한 통치에 대하여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유주의가 인간 개인의 본성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권리는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불복종’이나 ‘저항’이라는 행위는 대부분

집합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개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집합적 행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집단의 일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는 ‘의무’로서의 측면도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의 불복종 여부는 ‘집단’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Walzer, 1967: 163). 이와 같이 사회운동이 개인들의 집합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날 초국가적 사회운동은 국가 행위자에 대한 개인과 사회공동체의 복합적 도전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수준의 시민사회는 거시적·미시적 차원을 포괄하는 복잡한 상호작용 현상이다. 따라서 글로벌 시민사회의 다이나믹한 측면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사회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의 구조와 미시적 차원의 행위자 모두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¹¹ 거시적 차원에서 국제정치의 구조는 양극화나 다극화처럼 힘의 위계와 분포를 반영하는 글로벌 차원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를 가리킨다. 이에 비해 미시적 차원의 행위자는 국가 및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의 구성원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이해관계나 관심을 공유하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그룹, 기업, NGO 등 여러 유형의 행위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Lipschutz, 1992: 418-419).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의 국제정치이론은 국가의 권위 쇠퇴 또는 분산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대안의 행위자 모델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사회운동과 같은 초국가적 사회운동은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대안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한 ‘대항운동(counter-movements)’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인 개인들은 국가를 우회하여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합법성(legality)’과 ‘정당성(legitimacy)’ 사이의 간극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때마다 시민불복종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 의미

11. 이와 같은 복합적 프레임워크는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에 의해 국제정치학에 도입된 바 있다(Wendt, 1987). 이 논문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개인의 위상과 역할이 초국가적 사회운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것이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패러다임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에서 시민불복종과 초국가적 수준의 대항운동은 이제 국가, 그리고 국가중심의 국제정치질서를 겨냥한 정상적인 정치문화의 한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현재의 국가질서가 그 이데올로기나 성과 여부에 관계 없이 여전히 ‘구성적 불완전성(constitutive imperfectness)’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시민불복종이나 초국가적 사회운동은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를 지닌다. 대항운동과 민주주의적 국가체제는 토피와도 같이 맞물려 가면서 보다 나은 제도를 향해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정치체제는 ‘이상적 민주주의’라는 목표를 지향하면서 현재의 불완전함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가는 동적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Kellner, 1975: 911; Thomassen, 2007: 216).¹²

이와 같은 복합적 추세 속에서 전통적인 국제정치의 행위자인 국가는 이제 다양한 도전자들과 권위 또는 관할권을 둘러싸고 경합을 벌여야 하는 ‘경쟁국가(competition state)’로 탈바꿈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무소불위의 ‘국가이성(raison d'état)’은 이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고 세계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위한 ‘세계이성(raison du monde)’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McGinnis, 2004: 42; Cerny, 2010: 157-161).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개인 행위자는 권위에 도전하는 초국가적 사회운동을 통해 대항과 참여의 동학을 실천하고 있다(Vinthaghen, 2008: 144). 비록 이러한 움직임의 범위나 강도가 여전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권위를 둘러싼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오늘날 초국가적 사회운동과 그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위상은 국제정치이론의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초국가적 사회운동에 관한 논의가 국제정치이론에 대하여 갖는 두 번째

12. 1960년대 이후의 신사회운동은 정치현상을 이해하는 프레임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하향식 정치관념을 뛰어넘어 상향식, 분산형, 보편적 정치행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전이를 ‘체계(system)에서 생활세계(life world)로의 변화’로 설명했고, 푸코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의 개념을 통해 근대 정치관념의 모순을 관리할 필요성을 역설했다(Habermas, 1981, Volume 2: 153-197; Gordon, 1991: 1-51).

의미는, 전통적인 국가와 더불어 사회운동과 개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만들어 내는 상호작용의 구조, 즉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그 동안 국제정치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던 단위체인 개인의 문제를 ‘권위’와 ‘기본권’의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개인이 다양한 형태의 집합체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개인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치활동을 통해 자신들을 둘러싼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구조는 다시 개인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이 한층 더 복잡한 형태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의 개념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개념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초국가적 사회운동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결집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 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적 유대관계에 의해 참여 여부가 결정되곤 한다. 또한 한 개인이 사회운동에 얼마나 참여하는가는 해당 네트워크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의 여부 역시 사회운동의 동원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Diani, 2003: 309-312; Passy, 2003: 21-23). 예를 들어 19세기 중반의 노예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여성참정권을 확대하는데 따른 논란의 사례에서 국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영향력이 중요한 영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논쟁이 촉발되는 과정에서 반대 여론을 잠재우면서 적극적으로 해당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초국가적 옹호캠페인(advocacy campaigns)이 여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Keck and Sikkink, 2000: 51-53). 또한 사회운동의 확산과정에서도 네트워크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새로운 사회운동이 촉발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동원을 가능하게 해 주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 네트워크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Gould, 1991: 717-719).

네트워크 사회이론을 주창한 마뉴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은 세계화의

추세로 인한 글로벌 사회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를 ‘권력’ 대 ‘대항권력’의 상호작용으로 묘사한 바 있다(Castells, 2012: 5-7). 증가하는 상호의존의 구조 속에서 점점 복잡해지는 세계정치의 네트워크화는 권력의 원천을 뒤바꾸고, 권위의 소재를 둘러싼 치열한 갈등과 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초국가적 사회운동은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대안의 공공영역을 창출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Lipschutz, 2000: 172). 따라서 초국가적 사회운동은 전통적인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권력과 권위의 배분을 둘러싼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그 동안 국가 중심의 질서에 집중해 왔던 국제정치이론의 관심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국가적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합리적 투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국제정치이론에 부과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존 롤즈는 그의 『만민법』을 통해 공동체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차원의 글로벌 정의론을 제창한 바 있다. 그의 국제사회론은 무법국가(outlaw states)와 같은 비(非)자유적 정치체제 또는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회’의 만민들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궁극적인 도덕과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Rawls, 1999: 63). 이러한 롤즈의 이론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이 지닌 제한적이고 경직된 틀을 벗어나 도덕적 정당성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적 국제정치론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atz, 2003: 637). 특히 그의 논의는 공동체주의자들처럼 새로운 제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세계의 다양성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며, 국내정치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져 온 정의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롤즈의 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관념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국제사회에 대한 적용하는 데 있어 초국가적 사회운동의 사례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 논문은 국내정치 차원에서 전개되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 국제정치 차원에서 어떤 근거로 초국가적 사회운동으로 확장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롤즈 이후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의 단면을 진단코

자 하였다.

V. 맺는 말

초국가적 사회운동은 국가 단위체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국제정치질서에서 새롭게 나타난 예외적인 현상이다.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전개되어 온 세계화의 추세는 이러한 예외가 보편적인 것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수백 년 간 지탱되어 온 국제정치의 모습을 상당한 정도로 바꾸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 행위자가 일방적으로 권한과 권위를 독점해 오던 기존의 근대적 체제가 세계화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으로 인하여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배경 아래 국가의 권위가 어떻게 약화되고 있는지, 초국가적 사회운동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국가의 권위를 분산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21세기의 국제정치이론이 겪고 있는 패러다임 변환에서 초국가적 사회운동이 지닌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초국가적 사회운동이 사회과학의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 행위자에 대비하여 개인 행위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행사되는 권력의 일방적인 정치 관념 대신, 오늘날 보통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살아 있는 정치’에 대한 탐구가 점차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점차 권위의 원천이 개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바뀌도록 부추기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홉스의 ‘신민’ 지위에서 벗어나 국가에 도전하며, 대외적으로 초국가적 사회운동을 통해 그 권위를 이양 받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계약관계의 이면에 존재하는 ‘약속’에 대한 기대가 깨질 경우 계약을 통해 부여된 권위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저항권의 관념을 바탕으로 한다. 국내정치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지만, 국제정치에서는 권위의 명확한 소재가 확립되지 못한 까닭에 그 동안 이 주제에 관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초국가적 저항의 움직임은 국제정치이론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의 추세로 인하여 개인들이 국가에 대해 갖게 되는 복종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그러한 개인들은 초국가적 사회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국가질서를 전복하거나 수정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생각이 과거의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 ‘하위정치’ 차원, 즉 경제·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권 요소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대폭 축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권위는 이제 독점적인 지위에서 밀려나 경합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준다. 우선 그 동안 국가, 사회, 민족 등 집단적 현상을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 온 국제정치이론에 있어서, 오늘날의 복잡한 현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단의 근본적인 단위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권리와 요구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이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개인들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던 국가의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초국가적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초국가적 사회운동은 오늘날 정치의 주체가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연결구조, 즉 네트워크 형태로 바뀌어 가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제정치이론이 주로 단일 행위자 차원의 동기와 행동에 주목해 왔다면, 초국가적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복합적인 형태의 국제정치 행위에 대한 논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Acemo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 2012.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New York: Crown Business.
- Arendt, Hannah. 1961. *Between Past and Future: Six Exercises in Political Thought*. New York: Viking Press.
- _____. 1969. *Crises of the Republic*. San Diego: A Harvest Book.
- _____. 2006[1974]. *Eichmann in Jerusalem*. 김선옥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파주: 한길사.
- Bates, Robert. 2008. *When Things Fell Apart: State Failure in Late-Century Af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dau, Hugo A. 1961. "On Civil Disobedience." *Journal of Philosophy*, 58: 653-665.
- Beitz, Charles R. and Robert E. Goodin. 2009. "Introduction: Basic Rights and Beyond." In Charles R. Beitz and Robert E. Goodin (Eds.), *Global Basic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4.
- Bilgin, Pinar. 2003. "Individual and Societal Dimensions of Securit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5: 203-222.
- Bullington, John P. 1927. "International Treaties and the Clause 'Rebus Sic Stantibu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76(2): 153-177.
- Castells, Manuel. 2012. *Networks of Outrage and Hope: Social Movements in the Internet Age*. Cambridge: Polity Press.
- Cerny, Philip G. 2010. *Rethinking World Politics: A Theory of Transnational Neoplu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esters, Graeme and Ian Welsh. 2006. *Complexity and Social Movements: Multitudes at the Edge of Chaos*. London: Routledge.
- Diani, Mario. 1992. "The Concept of Social Movement." *Sociological Review*, 40(1): 1-25.
- _____. 2003. "Networks and Social Movements: A Research Programme." In Mario Diani and Doug McAdam (Eds.), *Social Movements and Network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99-319.
- Dworkin, Ronald. 2010[1977]. *Taking Rights Seriously*. 염수균 (역), 『법과 권리』. 파주: 한울.
- Edwards, Gemma. 2014. *Social Movements and Protes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ster, Jon. 2007. *Explaining Social Behavior: More Nuts and Bolts for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ucault, Michel.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 1972-1977. New York: Pantheon Books.
- Fromm, Erich. 1987. *On Disobedience and Other Essays*. 문국주 (역), 『불복종에 관하여』. 서울: 범우사.
- Gordon, Colin. 1991. "Governmental Rationality: An Introduction." In Gordon Burchell et al.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51.
- Gould, Roger. 1991. "Multiple Networks and Mobilization in the Paris Commune, 1871."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6): 716-729.
- Habermas, Jürgen. 1981.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umes 1 & 2. Boston: Beacon Press.
- Henderson, Conway W. 2010. *Understanding International Law*. Malden: Wiley-Blackwell.
- Holm, Hans-Henrik and Georg Sørensen. 1993. "A New World Order: The Withering Away of Anarchy and the Triumph of Individualism? Consequences for IR-Theory." *Cooperation and Conflict*, 28(3): 265-301.
- Hurd, Ian. 2008. "Theories and Tests of International Authority." In Bruce Cronin and Ian Hurd (Eds.),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Authority*. London: Routledge. pp. 23-39.
- Jasper, James M. 2004. "Intellectual Cycles of Social Movement Research." In Jeffrey C. Alexander et al. (Ed.), *Self, Social Structure, and Belief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32-253.
- _____. 2010. "Social Movement Theory Today: Toward a Theory of Action?" *Sociology Compass*, 4(11): 965-976.
- Jones, Peter. 2004. "Introduction: Law and Disobedience." *Res Publica*, 10: 319-336.
- Keck, Margaret and Kathryn Sikkink. 2000. "Historical Precursors to Modern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and Networks." In J. Guidry, M. Kennedy and M. Zald (Eds.), *Globa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 35-53.
- Kellner, Menachem M. 1975. "Democracy and Civil Disobedience." *Journal of Politics*, 37(4): 899-911.
- Krehoff, Bernd. 2008. "Legitimate Political Authority and Sovereignty: Why States Cannot Be the Whole Story." *Res Publica*, 14: 283-297.
- Lipschutz, Ronnie D. 1992. "Reconstructing World Politics: The Emergence of Global Civil Society." *Millennium*, 21(3): 389-420.
- Marchetti, Raffaele. 2009. "Mapping Alternative Models of Glob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1: 133-156.
- McGinnis, John O. 2004. "Individualism and World Order." *National Interest*, 28: 41-51.
- Milgram, Stanley. 2009[1974]. *Obedience to Authority*. 정태연 (역). 『권위에 대한 복종』. 서울: 에코리브르.

- Murphy, Mark C. 1997. "Surrender of Judgment and the Consent Theory of Political Authority." *Law and Philosophy*, 16: 115-143.
- Ohmae, Kenichi. 1996. *The End of the Nation State: The Rise of Regional Economies*. London: Harper Collins.
- Passy, Florence. 2003. "Social Networks Matter: But How?" In Mario Diani and Doug McAdam (Eds.), *Social Movements and Network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1-48.
- Pianta, Mario and Raffaele Marchetti. 2007. "The Global Justice Movements: The Transnational Dimension." In Donatella della Porta (Ed.), *The Global Justice Movement*. Boulder: Paradigm Publishers. pp. 29-51.
- Piven, Frances Fox. 2006. *Challenging Authority: How Ordinary People Change America*.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 Pogge, Thomas. 2005.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19(1): 1-7.
- Power, Paul F. 1970. "On Civil Disobedience in Recent American Democratic Though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1): 35-47.
- Rawls, John. 1999. *The Law of Peopl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3[1999]. 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역), 『정의론』. 서울: 이학사.
- Raz, Joseph. 1981. "Authority and Consent." *Virginia Law Review*, 67(1): 103-131.
- Reus-Smit, Christian. 2011. "Struggles for Individual Rights and the Expansion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Organization*, 65: 207-242.
- Rittberger, Volker, Martin Nettesheim, Carmen Huckel and Thorsten Göbel. 2008. "Introduction: Changing Patterns of Authority." In Volker Rittberger et al. (Ed.), *Authority in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p. 1-9.
- Rosenau, James N. 1992. "Governance,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In James N. Rosenau and Ernst-Otto Czempiel (Eds.),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9.
- Rotberg, Robert I. 2004. *When States Fail: Causes and Consequen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ggie, John G. 1993.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1): 139-174.
- Satz, Debra. 2003. "International Economic Justice." In Hugh LaFollette (Ed.), *The Oxford Handbook of Practical Eth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620-642.
- Shue, Henry. 1980. *Basic Rights: Subsistence, Affluence, and U. S.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nger, Peter. 1971. "Famine, Affluence, and Moralit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3): 229-243.

- Spitz, David. 1954. "Democracy and the Problem of Civil Disobed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48(2): 386-403.
- Strange, Susan. 1996. *The Retreat of th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 Kok-Chor. 2010. "Poverty and Global Distributive Justice." In Duncan Bell (Ed.), *Ethics and World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56-273.
- Tétreault, Mary Ann and Ronnie D. Lipschutz. 2009. *Global Politics As If People Mattered*.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 Thomassen, Lasse. 2007. "Within the Limits of Deliberative Reason Alone: Habermas, Civil Disobedience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6(2): 200-218.
- Thoreau, Henry David. 1999[1849]. *Civil Disobedience*. 강승영 (역), 『시민의 불복종』. 서울: 이레.
- Vinthagen, Stellan. 2008. "Is the World Social Forum a Democratic Global Civil Society?" In Judith Blau and Marina Karides (Ed.), *The World and US Social Forums*. Leiden: Brill. pp. 131-148.
- Walzer, Michael. 1967. "The Obligation to Disobey." *Ethics*, 77(3): 163-175.
- Wehberg, Hans. 1959. "Pacta Sunt Servand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3(4): 775-786.
- Wendt, Alexander. 1987.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3): 335-370.
- Winch, Peter. 2002. "How Is Political Authority Possible?"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25(1): 20-32.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and Individuals: Their Implications to State Author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young Won Mi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icate the origins and working mechanism of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since the relative demise of the state which has been major subject of international politics. We have developed much less theoretical discussion over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than their empirical investigations. The paper, in this sense, tries to look at the theoretical mechanism of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and their impacts on political authority. This leads to the introduction of the micro-level mechanism of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which shows political individuals' subjugation and resistance to state authority. Details over the origins of movements through the bottom-up way of political power as well as that of the top-down one. In particular, the paper argues that the level of satisfaction over the demands by ordinary people has become the most significant source of political authority. If a state cannot perform well in this function, then it will face social resistance such as civil disobedience. The same logic will be applied to the dimension of global politics where the breakup of promises automatically leads to a weaker authority. The paper stresses that this trend has been strengthened since globalization and has much implications over a new direc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Keywords: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State, Authority, Individuals, Basic Right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